



공무원 외부강의 등 신고여부 감사결과 보고



기획감사실

공무원 외부강의 등 신고여부 특정감사 결과 보고

청탁금지법 제10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에 의거 우리 구 공무원의 외부강의 등 적정신고 여부에 대한 감사 실시 결과 보고임.

[감사실-2769(2019.6.11.)호와 관련]

I 근거

-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제10조
- 「공무원 행동강령」 제15조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조
- 「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」 제16조(외부강의·회의 등의 신고)

II 감사개요

- 감사기간 : 2019. 7. 2. ~ 7. 11.(8일간)
 - ※ 사전자료수집(관련기관 자료요청) : 2019. 6. 18. ~ 7. 2.(11일간)
- 대 상 : 외부강의 등 신고대상 전 공무원
- 조 사 반 : 청렴감사팀장 외 1명
- 범 위 : 2018.10.1. ~ 2019.6.30. 기간 중 외부강의 등 신고대상 건
- 내 용
 - 외부강의 등 대가기준 초과 수령 여부
 - 신고대상 외부강의 등 신고사항 이행 실태
 - 지나친 외부강의 등으로 직무수행 소홀 여부 점검 등
 - 외부강의 요청 기관(단체)에 대한 우리 구 공무원 실시사항 조희로 신고누락 방지
- 결 과 : 지적사항 없음

Ⅲ

감사결과 및 조치계획

□ 총 평

-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‘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·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 등은 미리 신고하여야 하고, 대가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’는 규정에 따라 직원 외부강의 등 신고 및 초과사례금 수수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,
- 지난해 10월 자체 점검 및 우리 구 행동강령 개정사항의 지속적인 홍보로 외부강의 등에 참석하는 직원의 경우 사전신고 또는 2일 이내 사후신고, 횟수 초과 참석 시 구청장 승인 취득 등 신고절차 이행에 적정을 기하였음.
- 이번 점검 대상기간에는 지적 사항이 없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자인 경우에는 신고 제외대상임에도 신고한 경우가 1건 있어, 향후 교육 및 홍보 강화로 신고대상을 명확히 하고 외부강의 등에 대한 신고누락 등으로 위반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코자 함.

□ 외부강의등 신고

(단위 : 인원/진수)

구 분	계	학 교 의 강 의	협회(단체) 강의 등	기 타 회의 등	비 고
신 고 대 상	12 / 26	1 / 1	6 / 10	8 / 15	
신 고 제 외 대 상	1 / 1	-	-	1 / 1	국가기관
계	13 / 27	1 / 1	6 / 10	9 / 16	

※ 일괄신고건은 1건으로 산정

□ 검직허가 현황 : 4개부서 4명

□ 조사결과 및 향후계획

✓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의 신고 누락 여부

- 행동강령 규율대상인 외부강의 등은 대가여부에 관계없이 ‘직무관련성’이 있고, ‘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·지식을 전달하는 형태’이거나 ‘회의 형태’인 경우로 신고누락 사항은 없음.

▷ 향후계획

- 직무관련 외부강의 등에 대해 사전신고 누락·지연되지 않도록 지속관리

✓ 대가기준을 초과한 사례금 수령 여부

-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5조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은 1시간 400천원, 1시간 초과 시 최대 600천원으로, 대상기간 중 사례금은 총 13명 27건 4,048천원이며 기준초과 내역은 없음.

▷ 향후계획

- 대상기관(단체)에서 기준을 초과하여 사례금 지급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

✓ 지나친 외부강의등으로 직무수행소홀 여부

-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 참석자는 담당직무 수행과 관련한 경우 실시 하였고 기타 근무시간 외 활용 등으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직무수행 소홀사항은 없음.
- 월 3회를 초과하는 외부강의등에 참석한 경우가 1건 있으나 불가피한 직무관련 외부강의 수행으로 구청장 승인 후 참석하여 위반사항은 없음.

▷ 향후계획

- 부서장은 외부기관(단체) 강의 등 요청 시 관련공문 검토로 직무수행 소홀 사항이 없도록 참석여부를 신중하게 결정 ☞ 신고시 요청기관 공문 반드시 첨부
- 외부강의 등 횟수를 월 3회로 제한하고 직무상 불가피할 경우 구청장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전 검토·승인 관리 강화